

# 비정상적 거래 관행이 결국 일냈다

■ 전남무역, 양란 중 수출금지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 주먹구구식 계약 현지법인 임대료 '실종' 공기업 문제점 노출...농가 피해는 없을 듯

전남도 공기업인 전남무역의 중국 수출 전진기지 임대료 3억5천만원이 비정상적 거래에 의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또 전남무역이 중국 다롄(大連)에 설립한 '양란 수출 전진기지'를 둘러싸고 전남무역과 양란 재배 농가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양란 농가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농가와 전남무역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도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갈등의 시작=전남무역은 양란 '심비디움'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 다롄에 수출전진기지를 마련키로 하고, 지난 2004년 3월 중국 '장청농업발전유한공사'를 상대로 10년간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3억5천만 원에 임대료 계약을 했다. 그러나 당시 임대료를 받았다는 확인서까지 보내왔던 중국 측이 최근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면서 분쟁이 시

작했다. 다롄에 진출한 8개 양란재배농가는 이 같은 분쟁의 여파로 양란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3년간 25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는 어디로=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남무역 측은 중국현지법인에 임대료 3억5천만 원을 입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돈은 임대 주체인 '장청농업발전유한공사'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현지법인 대표 A씨의 친구 B씨와 '장청농업발전유한공사' 회장의 대리인이라는 C씨 등 2명에게 전달됐다.

전남무역이 A씨에 대해 '절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장성경찰에 고소하는데 대해 검찰이 지난 19일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 임대료가 이들 2명의 개인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금거래가 중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전남무역 측의 얘기지만 국가간, 기업 간 거래에서 분명 '비정상적'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무역 측은 또 임대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장청농업발전유한공사' 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학계·시민단체 대표 등이 28일 서울 미근동 임광빌딩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현판식을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부터 받았으나, 이 같은 확인서가 법적인 다름에서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 피해가 있었나=8개 양란 수출 농가는 2004~2006년 3년간 매년 양란 5만분씩을 수출하기로 했으나 2004년 첫 수출이 이뤄진 뒤로는 전혀 수출실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05, 2006년 2년간 수출할 계획이었던 10만 분의 양

란(묘목)을 그저 보관하거나 파문을 수박에 얹어 결과적으로 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남무역 측은 그러나 10만 분의 양란을 보관만 했다거나 파문었다는 농가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가들이 오로지 전남무역에 공급하기 위해 양란 10만 분을 준비해놓고, 다른 곳에 팔지도 않고 썩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양란 1차 수출본의 경우 품질이 나빠 수출이 곤란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농가에 전달된 1차 수출금액 7억2천여만 원도 양란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된 것으로, 농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남무역 측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이번 사태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한화갑 대표 바쁘시죠?



임동욱

서울 취재본부 차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요즘 바쁘다. 여의도 민주당 당사 대표실은 늘 북적인다. 당내외의 면담 일정이 하루평균 20건, 선약 없이는 한대표의 얼굴 보기가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현장 대표 가운데 민주당 한대표가 가장 바쁘다"는 말까지 나온다. 별다른 정계개편론들이 난무하는 한 가운데 한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한대표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9석의 미니 정당으로 몰락한지 3년 만의 일이다. 그때 한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없어질 당'이라는 당시로서는 다소 과격한(?) 구호와 함께 자강론의 깃발을 들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때도 한 대표는 "나갈 사람은 나가라. 나 혼자라도 민주당을 지키겠다"며 대외 강경 노선을 고수했다. 이후 한 대표는 민주당을 이끌고 전남도지사 선거 등 전남지역에서 치러진 대부분의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한화갑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이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재기 배경에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민주세력 통합에 나서 호남이 기반이 되는 정권 창출에 나서라'는 지지자들의 지상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 대표는 정계개편의 초안들을 잇따라 던져보고있다.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거론하다가 다시 "한-민 공조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해쳐모으십시오'를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을 흔들려고하고있다.

하지만 한대표가 마냥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엔 그가 처한 현실이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가 갈리는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있는 데다, 11석이라는 소수 야당의 현실은 그의 의도만큼 판을 흔들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정계개편을 앞둔 여당의원들이 한대표에 거부감을 갖는 것도 문제다.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은 민주세력 대통합에는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한 대표가 펼쳐왔던 대외 강경발언을 의식하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에게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유연한 리더십이다. 즉 정계개편 과정에서의 분당세력 배제 등 폐쇄적이고 독불장군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민주세력의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그가 정권 창출의 길을 열고 한국 정치사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명멸하다 사라져가는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에 그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tuim@kwangju.co.kr

## 양형일 의원 광주경찰청 산파역

### 내년 7월 개청 확정...일선 경찰관들 감사전화 쇄도

행정자치부가 광주경찰청 개청을 확정 발표한 지난 27일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시진)의 국회 사무실에는 일선 경찰관들의 감사 전화가 줄을 이었다. 여기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양 의원의 읍소성 압력에 시달렸던 이응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장병안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고위공무원들도 양의원에 감사 전화를 해왔다. 양형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행정위에 배정되고 첫 국정감사에서 광주경찰청 신설 필요성을 인지했으나 당장 개청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과중한 치안 수요에도 정부에서 예산 및 공무원 정원 증가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할 때는 울화도 치밀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 2005년부터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하며 설득 작전을 펴는 등 광주경찰청 개청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돼 나간 양 의원은 결국 올해 4월 당정협약에서 광주 경찰청 신설을 확정시켰다. 광주경찰청 개청의 산파역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대진경찰청 신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광주경찰청 신설도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양형일 의원은 "광주경찰청 신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준 광주지역 의원들의 영향이 컸다"며 "광주경찰청 신설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치안 서비스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수도권 규제완화 생존권 차원 강력 대응"

### '균발협' 회장 민주당 이낙연 의원

"균발협(지역균형발전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수도권 규제완화 견제, 지방의 불필요한 규제 해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지방 투자 유치 등 3종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단체장과 시·도별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균발협' 회장을 맡은 이낙연 민주당 의원(영광·함평)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고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의원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 생산가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 80%가 집중돼 있음에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지방의 공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산업 회생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를 위해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법 제·개정시 관련 부처에 공동 의견을 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연대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 피해사태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균발협은 이와 함께 그린벨트, 공공립 공원, 수자원 보호구역 등에 묶여 있는 지방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과 토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이용**  
**오늘 출연**



**김범룡**  
**10월 11, 12일**

**부킹전국 100%**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